

## 대국민 규제·불편사항 개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9일 대국민 규제 및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내부규정 일괄정비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에서 운영 중인 사규, 지침·요령 등 내부규정이 고객에게 불합리하게 규제로 작용하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및 '친서민 정책'과 공사의 경영선진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어촌공사는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합하는 20개 과제를 선정해 농어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고객이 보다 편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상시규제개선 건의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농어촌공사의 규제완화를 위한 내부규정 일괄정비 주요내역.

### ▲ 농어업회사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금 부과 기준 및 방법 완화

- 철거가 필요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철거보증금 납부 면제 가능토록 개선
- 사업이행보증금 납부시기 완화 : 계약체결 전 → 계약체결시

### ▲ 각종 시설물 등 사용자에게 대한 연체료 부과 기준 개선으로 부담 완화

- 1~3차 독촉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3~100분의5 징수 → 연체일수(1개월, 3개월미만, 3개월이상)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 징수

### ▲ 불우청소년 농어촌현장 체험학습시 숙식 무료 제공 대상 확대

- 대호환경사업소 체험학습시 숙식 무료제공 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 가정형편으로 체험학습에 참가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 자녀도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무료숙식 제공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 농지임대차 계약 해지사유 완화

- 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서 "수확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확량의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를 삭제

### ▲ 농어업회사 임대차 계약의 약관변경시 임차자에게 통지사항 확대

- 임차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서면통지 → 모든 변경사항 서면통지

### ▲ 천재지변시 임대료 등 감면 근거 마련을 통한 부담완화

- 공사 물품의 임차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 및 이자에 대하여 감면 근거 마련

###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임차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기준 개선

- 과거 3년간 평균수확량 기준 → 행정기관이 조사한 피해율 기준

### ▲ 농지임대차 계약의 불명확한 연체이자율 기준 삭제

- 농지임대차 계약에 있어 "이자율·계산방법 변동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적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의적 적용 방지

〈자료: 농업인신문 12.10〉

## 농지규제완화 법 개정안 발의

### 운영 의원 "진흥구역내 관광시설 설치 가능"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농어촌 관광사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임·어업용 건축물이나 마을회관 등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국토법 개정안도 나왔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경남 거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법 개정안에는 또 농·임·어업인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은 최대 90%, 용적률은 최대 200%를 기준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농민신문 12.15〉

##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사업 “농업인 일손부족 해소 도움”

수혜농가 82% 만족 ... 지원인력 확대 요망

농협이 법무부와 협력해 펼치고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사업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전국 125개 시·군 125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사업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86.4%인 108농가가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사업 수혜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조사 대상 농가의 92.8%가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농촌지원사업 수혜 농가의 82.4%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농가의 84%는 내년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80.8%는 사회봉사 대상자 수송을 위한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농가들은 지원 우선순위로 인력 지원 확대를 가장

먼저 꼽았으며 차량 지원, 중식비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농촌지원사업 불만 내용으로는 짧은 작업시간(60.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작업능률 저하(28.6%), 사회봉사자 태도 불량(10.7%)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촌자원개발부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와 공감대가 높게 나타나는 만큼 내년에는 인력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 농가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아울러 작업시간을 연장하고 집결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동 차량 확보 등 사업 추진 비용 확보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농민신문 12.15〉

## 농식품부, 내년부터 3년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논을 활용해 조사료나 콩 등 다른 작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쌀 생산조정과 쌀 이외 작목의 자급을 향상, 지역특과 품목 육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대상지는 2010년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논과 올해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고 보조금을 받은 논이 되며, 재배작목은 농가 자율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2011년 1월 5일부터 2월 21일까지다. 농가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 이상이며, 규모화·집단화된 지역은 선정시 우대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4만ha의 논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물부는 이번 논 소득기반 다  
양화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정책 사업과 연  
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국내 생산량이 적  
어 수입하고 있는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재배농  
가에게는 종자대 지원(보조 30%) △경영체에는 사  
일리지 제조비(톤당 3만원) △우수 경영체에는 기  
계장비 1억5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 조직화된 경  
영체가 신규로 논에 소득작목을 30ha이상 재배할  
경우, 평가를 통해 2000만원의 교육·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지역에 적합한 2~3모작 작부체계 기술  
책자도 발간·보급하기로 했다. 또 농업관측을 강  
화하고 관측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배 확대를 적극 홍보하며, 수확기 수급  
불안이 우려될 경우에는 비축사업과 채소류 수급안  
정사업 등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인해 타 작  
목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생 작물(2  
만5000ha), 조사료 작물(1만ha), 다년생 작물  
(5000ha)로 한도를 정해 신청받을 계획이며, 특정품  
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경우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논을 활용해 다른작  
목을 재배할 경우 국내 자급률 향상은 물론, 수입대  
체 등 일거다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12.12〉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통계를 발  
표하며 젊은 층의 도시전출과 노인인구 증가 등으  
로 1990년대부터 30~50대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70세 이상은 2009년  
전체 농어가인구의 22.8%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가소득은 3081만4000원으로 2005년 이후  
정체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농촌인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  
지만 각국 정부는 이에 걸맞게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농업정책지원과 농업과 농촌투자도 대폭 확대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다 강화된 농업지원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한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 돼야 국토의 균  
형적인 발전이 가능한 만큼 농촌인구비율을 늘리기  
위해 보다 공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  
혔다.

이와 관련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  
총장은 “농촌의 젊은 농업경영인들의 육성과 귀  
농·귀촌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농어민신문 12.12〉



## 농어가인구 23% 70세이상 '고령화 심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수와 농가인구가 119만  
5000가구와 311만7000명으로 1970년 대비 각각  
51.9%와 78.4%나 감소하고 농가소득도 수 년간 정  
체상태임에 따라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